

野 “중대재해법 유예, 사과·구체방안 등 4가지 조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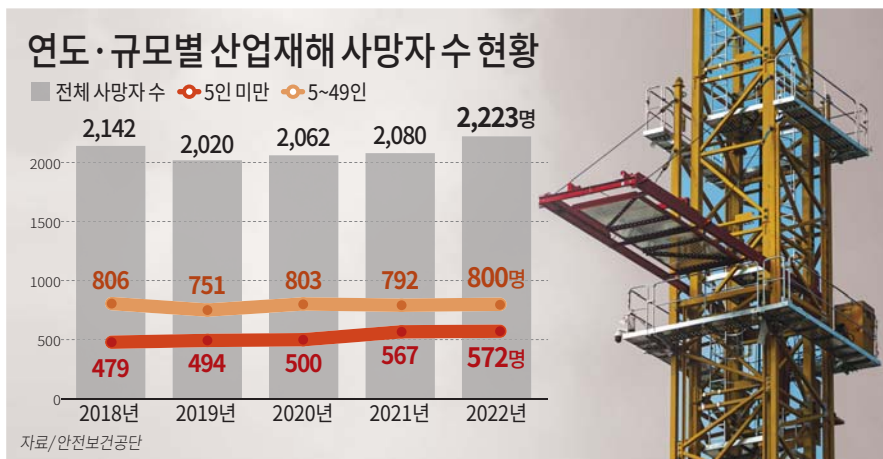
홍익표 “당정, 여론 호도… 유감 유예 논의 조건으로 3가지 원칙과 중소기업조합법 개정안 통과 제안”

경영계, 경영상 어려움 호소 노동계, 적용 유예 강력 반발

경제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2년 유예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



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관리 투자 여력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까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돼 관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벌하는 판결도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

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7일 법 적용 2년 유예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면 확대를 늦추는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라는 법 취지와 반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발표한 연도별 사업자 규모별 사망자 수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사고사망자+질병사망자) 사망자 수는 8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으로

법 시행인 2022년엔 오히려 늘어났다.

정치권에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빌려 민주당도 법 적용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1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법 적용 확대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유예 시, 중대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2년 후 법을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와 경제계 입장이 있으면 유연하게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 이후 언론들이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당정도 관련 협의를 하면서 법을 적극 추진한 민주당이 도리어 법 적용 전면 확대를 늦추는 데 일조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첫째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 준비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세번째 2년 유예 이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지는 제안을 했다.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없다”며 조건을 추가로 걸며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가 추가조건을 내걸면서 법 적용 2년 유예는 또 다른 정치 쟁점이 되어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 적용 유예 조건을 말씀하셨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즉각 “개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고, 민주노총은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혁신위 안전, 보고 안 돼” vs “요청 없었다?… 사실 아냐”

(국민의힘 지도부)

(인요한 혁신위원회)

희생 혁신위 안전, 보고 안 돼
혁신위, 오는 7일 다시 보고 예정
일각선 ‘비대위 전환’ 요구 목소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일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합치 출마 또는 불출마(희생) 혁신안의 최고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당초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윤계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최후 통첩을 날리며 이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혁신위 안전이 보고 안 됐다”고 했고, 혁신위는 “혁신위가 최고위에 안전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상정을 예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후 취재진들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혁신위 안전이 보고 안 됐다”며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 혁신위 안전이 왜 안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안전 보고 요청이 없었다는 사무총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될 것이라고 알려진 혁신안이 보고조차 안

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가 (불출마 혁신안을) 어떤 형태로 보고할지 정리가 돼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모시고 와서 활동하는 혁신위인 만큼, 혁신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자는 의견이 공유되고 대부분 동의했다”면서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건 본연의 역할과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중진·친윤계 등의 희생은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절한 셈이다.

반면 혁신위는 최고위에 상정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에 안전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

실이 아니다”라며 “다시 목요일(7일) 최고위에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이후의 절차는 당 기획조정국(기조국)이 최고위원회 보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어제(3일) 기조국에 오늘 최고위에 안전이 상정되는지, 누가 보고하는지를 의논하니, 향후 혁신위 안전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안전을 모두 모아서 상정하라는 이야기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한 혁신안을 한꺼번에 보고한다는 것은 활동 종료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식 보고를 하기 위한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최종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정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당의 모든 기구들은 당헌 당규의 원칙 아래 돌아간다. 혁신위라고 해서 예외적인 조직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도부는)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을 따르고 존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저희도 정리된 것이 오면 총선 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혁신위의 안전이 최고위에 보고되면, 총선기획단이나 공천위에 그 내용이 넘어가 반영되는 ‘통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총장은 “어떤 언론에선 ‘혁신위 제안 중에 하나밖에 안 받아줬다’고 말하지만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희생’ 혁신안을 최고위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위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대위 전환’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

與 뉴시티 특위, 이번엔 광주로… “서울·부산·광주 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강기정 “수평적 조성이 바람직”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 위원장이 4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메가시티의 축으로 서울·부산·광주를 새롭게 제시했다.

‘서울 메가시티’로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부산·울산·경남)와 ‘서남권 메가시티’ (광주·전남)도 띄워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겠

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이슈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 참석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부산·광주를 3축으로 지방 소멸·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탈출을 위해 메가시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소 늦었지만 젊은이들이 지방 도시에 살며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광주가 국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세계적 경쟁력뿐 아니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만 특별시로 볼 것이 아니라 광주는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특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부산·광주를 3축으로 한 메가시티 구상엔 공감하면서도, 메가시티를 조성할 경우 주변을 흡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부산 축 균형 발전을 말씀하시며 아쉬웠지만 뉴시티 특위에서 부족분을 메꾸셨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중심에서 전국 3축 다극화가 된 것처럼, 광주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을 흡수하면 주변이 반발할 것”이라면서 “전주권·새만금권·광양권·목포권·광주권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초광역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에서는 국토 서남권의 절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서예진 기자